

5/ 아베 정권과 보수시민사회: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을 중심으로 *

구유진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
이 개최한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비디
오 메시지를 보낸 아베 총리. © 아사히신문

구유진(具裕珍) 도쿄대학 동아시아연구소원 특임조교, 도쿄대학 박사(학술). 주된 연구분야는 일본 보수시민사회 정치과정으로, 보수시민사회의 동원과 정책제언활동 등을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日本政治における保守の変容への一考察: 1990年以降の「保守市民社会」の台頭に着目して」, “A Configurative Approach to Conservative Mobilization in Japan: The Effect of Combining Political Opportunities and Threats”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JSPS KEKENHI 20K1339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https://doi.org/10.291514/ILBI.2021.25.126>

1. 들어가며

2020년 8월 28일, 아베 총리의 돌연 사퇴로 약 8년간 이어지던 아베 정권이 막을 내렸다. 아베 총리는 전후(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총리 가운데 가장 긴 재임기간을 자랑하며 ‘아베 1강’, ‘자민당 1강’이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견고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요인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분석해 왔다. 그 가운데 주목을 받은 것이 아베 정권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일본회의’였다. 아베 총리 사퇴 후 일본회의의 기관지 『일본의 숨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아베 로스(安倍ロス, 아베 총리를 잃은 상실감 - 인용자)와 함께 보이는 것들”

아베 총리가 사임한 8월 말부터 인터넷에는 이 말이 다수 회자되었다. 사의를 표명한 아베 총리에 대한 석별의 마음과 상실감의 표시일 것이다. 아베 총리를 아끼는 목소리가 이렇게 많았음에 한 번 놀라고, 아베 로스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음에 또 놀랐다. 사의표명 직후부터 전 세계 지도자들과 유명인사들이 아베 총리에게 찬사와 아쉬움의 트윗을 보낸 것이다. ... 아베 로스의 국민감정은 내각지지율의 대폭 상승으로도 나타났다. ... 이런 총리에게 지금은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을 위해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다. 아베 총리는 건강을 되찾아 반드시 다시 싸워 줄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¹

이 기사는 일본회의와 그 지지자들이 아베 총리의 사임을 아쉬워하고 다시 돌아오길 응원하는 지지세력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들은 왜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가? 그들은 어떠한 지지세력이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2012년 12월, “일본을 되돌리자”(日本を取り戻す)라고 주장하며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하는 헌

1 『日本の息吹』, 2020년 10월호, 2쪽.

법개정 등 내셔널리즘 색채가 짙은 어젠다를 추진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일본회의 역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2014년에는 해외 저널리즘과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의 매체가 일본회의를 조명하고, 2016년부터는 일본회의에 관한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² ‘일본회의 붐’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주목받던 일본회의는 이후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의 중심축으로 이해되었으며,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과 행보 뒤에 일본회의가 있다는 글들과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이로 인해 일본의 정치사회의 ‘우경화’ 논의가 촉발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회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와의 관계, 더 나아가 일본 정치에 있어서 보수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의 관계를 시민사회 정책제언활동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때로는 과대평가되고 때로는 과소평가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회의의 활동과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사회 정책제언활동의 역할을 살펴보고, 일본회의를 보수시민사회라는 틀에서 규명한다. 이를 통해 보수시민사회로서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을 일본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등을 통해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정책제언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일본회의와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의 특징과 활동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의 함의를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보도와 관련해서는 依義文, 『日本会議の全貌: 知られざる巨大組織の実態』, 花伝社, 2016, 10~11쪽 참조. 초기의 대표적인 관련서적은 依義文 이외에도 菅野完, 『日本会議の研究』, 扶桑社新書, 2016; 青木理, 『日本会議の正体』, 平凡社新書, 2016.

2. 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과 보수시민사회로서의 일본회의

탈냉전 후 시민사회의 고유한 영역과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국가에 포섭된 영역이 아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특히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에 주목해 시민사회를 분석해 왔다.³ 시민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단체들의 구성, 성격, 활동 내용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논의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 국가와의 관계가 설정, 분석되어 왔다. 특히 이 국가-사회 관계에서 관심을 모으는 분야 중의 하나가 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이다. 이 장에서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의 틀을 통해 일본회의라는 단체를 보수시민사회의 일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책제언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

시민사회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정책제언활동(advocacy)을 비롯, 서비스 제공, 시민으로서의 교육 등이 거론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시민사회는 복지, 돌봄, 의료, 환경,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유상/무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개개인이 시민사회 영역에 속한 다양한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덕목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⁴

또한 시민사회는 정책제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

3 Jack L. Walker,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Patrons, Professions and Social Movement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辻中豊 編, 『現代日本の市民社会・利益団体東京』, 木鐸社, 2002; Allan J. Cigler, Burdett A. Loomis, & Anthony J. Nownes, eds., *Interest Group Politics* (Tenth edition), Rowman & Littlefield, 2020.

4 Nina Almond &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2015).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제언활동이란 “공공정책이나 여론,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 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나 사회를 향해 이루어지는 주체적 행위”로 정의될 수 있는데,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필요를 찾아내 공론화하고, 선거과정에서 답을 수 없는 사회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며, 일정 정도 국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치사회 문화, 규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⁵ 정책제언활동은 한편으로 의회와 국회의원, 정부와 관료, 사법 기구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단체 조직, 서명활동, 행진, 데모,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형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2) 일본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과 보수시민사회로서의 일본회의

그렇다면 일본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은 어떠한가? 일본의 시민사회를 연구한 페카넨(Pekkanen)이, 일본시민사회를 사회자본과 효율적인 행정을 뒷받침하는 결사 네트워크가 약 30만 개 이상으로 풍부한 반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나 정책개혁에 기여하는 전문적 정책제언활동 집단이 결핍된 이중구조를 가진 “정책제언 없는 다수의 결사”(members without advocates)라고 지적한 것은 유명하다.⁶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제정과 개정, 2010년 이후 반원전운동과 안보법제반대운동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이 새로이 조명되고 있다.⁷

이처럼 일본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종래의 지적과 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 정책제언활동의 분석의 틀 가운데, 일본회의의 활동은 어느 즈음에 위치하며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

5 坂本治也, 「市民社会論: なぜ市民社会が重要なのか」, 坂本治也 編, 『市民社会論: 理論と実証の最前線』, 法律文化社, 2017, 12쪽. Kenneth T. Andrews & Bob Edwards, “Advocacy Organizations in the U.S. Political Proc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1), 2004.

6 Robert Pekkanen, *Japan's Dual Civil Society: Members without Advoca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59.

7 原田峻, 『ロビイングの政治社会学: NPO法制定・改正をめぐる政策過程と社会運動』, 有斐閣, 2020.

해서는 우선, 일본회의를 시민사회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시민사회의 범주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시민’과 ‘시민사회’라는 개념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상적 개개인들이라는 규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이데올로기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우파에서는 ‘국민’을, 좌파에서는 ‘시민’을 강조해, 일본회의도 자신의 운동을 ‘국민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일본시민사회 연구자인 사카모토가 지적하듯이,⁸ 시민사회의 실태와 기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시민사회도 ‘나쁜’ 시민사회도,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라는 하나의 포괄적 영역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어떠한 부분이 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지 또는 그 반대작용이 나타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⁹

예를 들면, 일본의 ‘천황제’와 전후민주주의 관계를 분석한 루오프는 건국기념일(2월 11일)과 원호 법제화 제정 운동을 주도한 우파운동을 ‘시민사회’의 문맥 안에서 파악하고 있다. 루오프는 “기원절 부활과 원호 법제화를 목표로 국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우파 단체는 종래의 좌익운동의 전매특허였던 다양한 풀뿌리운동 전략들을 도입했다. 이러한 우파조직은 일본의 다양한 ‘여론’, 즉 ‘시민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한쪽에 리버럴한 시민사회, 다른 쪽에 보수적 국가를 상징하는 단순한 이분법은 그만두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¹⁰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을 연구한 히구치는 배외주의운동 재특회를 탄생시킨 것도 일본의 시민사회이며 재특회 운동을 위축시키고 퇴출시

8 坂本治也, 「市民社会論: なぜ市民社会が重要なのか」, 6~7쪽. 전후 일본에서 ‘시민’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Simon Andrew Avenell, *Making Japanese Citizens: Civil Society and the Mythology of the Shimin in Postwar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참조.

9 이러한 점에서 우파 단체 연구자들은 우파 단체를 포함시킨 새로운 분석틀과 방법론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Rory McVeigh, *The Rise of the Ku Klux Klan: Right-Wing Movements and National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pp. 7~10. 鈴木彩加, 『女性たちの保守運動: 右傾化する日本社会のジェンダー』, 人文書院, 2019, 25쪽.

10 케네스·루오프, 『国民の天皇: 戦後日本の民主主義と天皇制』, 共同通信社, 2003, 226쪽.

키는 자정작용을 구사한 것도 일본의 시민사회라고 지적했다.¹¹

이 글에서도 일본회의가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주변국을 자극하는 주장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하되, 일본회의를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시민사회 정책제언활동의 틀 안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성보수정당인 자민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세력인 ‘보수시민사회’로서의 일본회의를 파악하고자 한다.¹² 이를 통해 보수시민사회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수의 결사”(small members with advocates)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3.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

이 장에서는 보수시민사회로서의 일본회의가 어떠한 주장과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정책제언활동을 개관한다.

1) 일본회의와 그 활동

일본회의는 종교단체가 연합해 만든 일본을 지키는 모임(日本を守る会, 1974년 설립)과 문화계와 학계 인사들이 모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国民会議, 1981년 설립)가 1997년 5월 통합되어 발족한 단체다. 두 단체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상술한 ‘기원절’(紀元節) 부활과 원호 법제화, 수정주의 역사교과서 편찬 등을 주도했으며, 1990년대에는 ‘중전50주년 국회결의(부전결의)’를 반대하는 500만 서명운동¹³을 전개했다. 특히 부전결의반대운동은 두 단체가 전국적으로 벌인 첫 번째 반대운동으로서 조직으로서 통합

11 樋口直人, 「排外主義の台頭: 市民社会の負の側面」, 坂本治也 編, 『市民社会論: 理論と実証の最前線』, 法律文化社, 2017.

12 ‘보수시민사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具裕珍, 「日本政治における保守の変容への一考察: 1990年以降の「保守市民社会」の台頭に注目し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79, 2021.

13 具裕珍, 「日本における政治的脅威と保守運動: 1990年代の不戦決議反対運動を中心に」, 『アジア地域文化研究』 14, 2018.

하는 유인(誘因)을 제공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의장인 마유즈미 도시로(黛敏郎)는 “오늘날 국민회의를 결성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국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어 진정한 여론을 형성해 가야 할 때”라며 새로운 통합단체 일본회의 결성의 배경을 설명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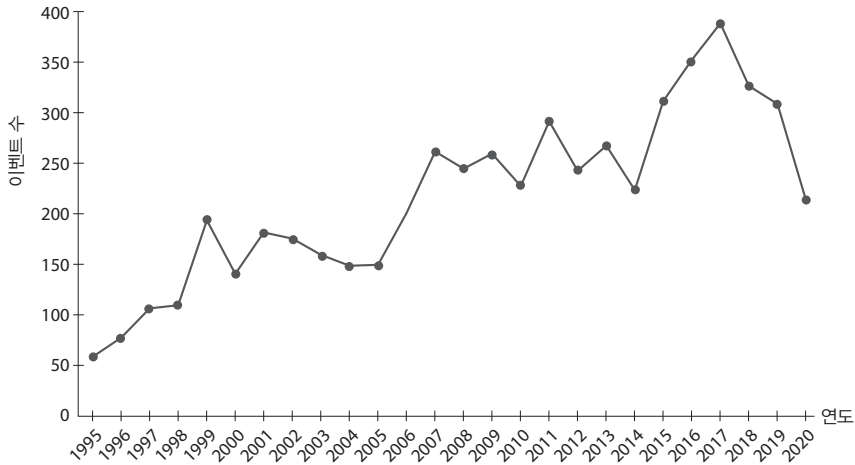
일본회의는 결성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목표와 운동방침을 제시했다.¹⁵

- (1) 아름다운 전통의 국민성을 내일의 일본에: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한 황실을 존중하고 국민동포감을 함양한다.
- (2)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우리나라 본래의 국격에 맞는 ‘신 헌법’ 제정을 추진한다.
- (3)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치: 독립국가의 주권과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책임 있는 정치 실현을 기약한다.
- (4) 일본의 감성을 키우는 교육의 창조: 교육에 일본의 전통적 감성을 되찾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는 청소년을 육성한다.
- (5) 국가의 안전을 높이고 세계평화에 기여: 국가를 지키는 기개를 키우고, 국가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국방력을 정비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6) 공생공영의 마음으로 이어진 세계와의 우호: 넓은 국제적 이해를 심화하고 공생공영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우호 개선에 기여한다.

요약하면 황실 존중, 헌법 개정(특히 9조), 적극적인 정치 참여, 교육기본법 개정, 국방력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강화로 정리할 수 있는데, 헌법

14 『日本の息吹』, 1997년 5월호; 依義文, 『日本会議の全貌: 知られざる巨大組織の実態』, 39쪽; 김숙현, 「일본회의와 아베 정권의 정책 성향과의 상관관계 연구」, 이명찬 편, 『‘일본회의’와 아베 정권의 우경화』, 동북아역사재단, 2018, 104쪽.

15 『日本の息吹』, 1997년 7월호.



〈그림 1〉 일본 보수시민사회 이벤트 수 추이

출처: JCED (Japanese Conservative Event Data, 1995~2012)에 2013~2020 데이터 추가, 5607건, 데이터 소스: 일본의 숨결)¹⁶

개정 및 다른 목표보다도 국민통합을 위한 천황제 지지와 황실 존중을 우선 시험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독립국의 주권과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정치 실현을 기약한다”는 운동방침은 일본회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시사하고 있다.

사실 일본회의는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아름다운 일본의 재건과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 정책제언과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밑줄 강조는 인용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책제언’과 ‘국민운동’을 통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전개해 왔다. 그 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보수시민사회의 이벤트 수 (모임 및 집회 개최, 서명 활동, 정치인 면담 등) 추이를 보여 준다. 우선 무엇보다 일본 보수시민사회의 활동이 1990년대 이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약 216건의 이벤트가 실시됐으며, 일주일에

16 사회운동의 이벤트 분석에 관해서는 Ruud Koopmans & Dieter Rucht, “Protest Event Analysis,” in Bert Klandermans & Suzanne Staggenborg, eds., *Method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University of Minnesota, 2002 참조.

약 4일 정도는 일본 전국 어딘가에서 보수시민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 보수시민사회의 활동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제2차 아베 정권이 시작된 이후 2014년부터는 그 활동이 한층 더 증가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정점을 이룬 것은 2017년으로, 이 해 일본 회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제2차 아베 정권 발족과 더불어 활발히 추진한 헌법개정운동과 함께 조직역량강화(지부 수와 회원 수 확대)를 위한 활동이 크게 증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준 해가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되면서 준비됐던 이벤트들이 대거 취소돼 이벤트 수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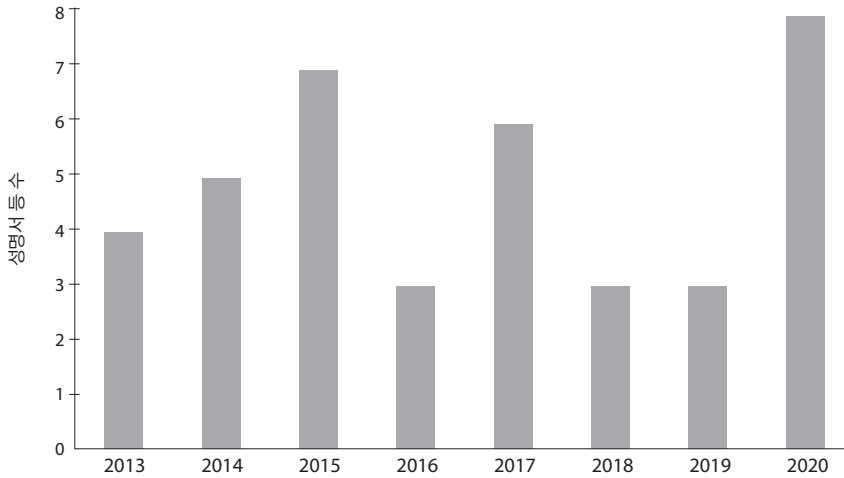
일본 보수시민사회를 연구한 구유진은 이러한 일본의 보수시민사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환경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안, 배타적 내셔널리즘, 애국심이라는 조건들이 정치적 환경, 특히 보수시민사회에 호의적인 정책 추진 등의 정치적 기회와 보수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정책 추진 등의 정치적 위협과 결합해 보수시민사회의 동원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건을 이룬다고 분석함으로써,¹⁷ 보수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적 환경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

일본회의는 상술했듯이 활발한 정책제언과 국민운동을 펼쳐 왔다. 일본회의의 기관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2년까지의 이벤트 데이터(JCED)를 살펴보면, 일본회의는 상기한 운동방침과 자신들의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 형태로 대부분 집회·모임을 개최하고 있었다.¹⁸ 더불어 이 시기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수상 면담, 대신 면담, 중앙성청 진정서 제출), 정치가(자민당 간부 면담, 국회의원 면담, 의원연맹 관련 활동, 정치가 참여 집회), 그리고 지방정치(지방정부,

17 Yoojin Koo, "A Configurative Approach to Conservative Mobilization in Japan: The Effect of Combining Political Opportunities and Threats," *Japanese Political Science Review* 5, 2020.

18 매년 절반 이상의 활동 형태가 집회·모임 개최였다. 이와 관련해 그림과 자세한 설명은 具裕珍, 「日本政治における保守の変容への一考察: 1990年以降の「保守市民社会」の台頭に着目して」, 127쪽 참조.



〈그림 2〉 아베 정권하 일본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수 추이

지방정치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제언활동이 많게는 전체활동의 2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베 정권 시대에도 계속된다.

일본회의는 또한 여러 이슈에 대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말미에 성명서나 결의서 등의 형태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 정책제언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뿐만 아니라 당면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기관지를 통해서도 성명서, 의견서, 결의서, 선언서 등을 발표·소개하고 있는데, 〈그림 2〉는 일본회의가 아베 정권하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아베 정권하에서 매년 3건 이상의 성명서 등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5월 3일(헌법의 날) ‘공개 헌법포럼’과 8월 15일(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 중앙 국민집회 개최 후 집회에서 발표되는 성명서가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하에서 발표된 성명서의 특징은 그 대부분이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일본회의는 매년 5월 3일 헌법의 날 포럼에서 발표하는 성명서 이외에도, 2015년 11월 10일 도쿄 니혼부도칸에서 개최된 ‘지금이야말로 헌법개정을! 만명대회(이하 만명대회)’에서 이루어진 대회 결의문, 2016년 4월 28일, 센다이시에서 열린 헌법포럼에서 긴급사태조항 신설 요

구서를 발표하는 등 헌법개정을 위한 정책제언활동을 전개해 왔다.

성명서 발표가 많았던 2015년에는 헌법개정 이외에도 7월 6일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안전보장관련법제문제에 대한 견해’와 8월 6일 ‘중전 70주년 견해’를 발표했다. 2017년에는 헌법 관련한 행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12월 기관지를 통해 ‘소위 ‘여성천황’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남계에 의한 안정적 황위계승을 견지하는 방책 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2020년에 성명서 등이 다수 발표된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초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에 반대하는 성명이 3회에 걸쳐 발표됐기 때문이다.

성명서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발표된 성명서들이 정치가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회의가 개최하는 많은 모임에 중앙과 지방 정치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그 모임에서 발표된 성명서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치인들에게 전해진다. 아베 정권하에서의 특징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직함으로 일본회의 행사에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2015년 11월 10일 헌법개정집회를 시작으로 재임시절 매해 5월 3일 헌법포럼에 메시지를 보냈다(총 6회). 2015년 11월 10일 집회는 전해 일본회의가 헌법개정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설립한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국민의 모임)’이 니혼부도칸에서 개최한 만명대회로, 이 만명대회는 일본회의의 조직을 총동원하는 대회나 다름없는 것으로 과거에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¹⁹ 이러한 모임에 아베 총리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크게 모았다.

집회 메시지에서 아베 총리는 지지자들을 향해 “조속한 헌법개정 실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헌법개정운동을 위해 일본회의가 설립한 단체-인용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헌법개정 천만 찬성자 확대운동을

19 Yoojin Koo, “A Configurative Approach to Conservative Mobilization in Japan: The Effect of Combining Political Opportunities and Threats,” p. 39.

추진, 일본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불러일으켜 주고 계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정신을 일본 전체로 확대해 가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헌법개정을 위해 다 함께 차근차근 걸음을 옮겨 나갑시다.”라고 전했다.²⁰ 일본회의 지지자들의 활동을 숙지하고 있고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날 대회 결의문은 국민의 모임 공동대표인 미요시 도루(三好達, 일본회의 회장)가 자민당을 대표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중의원 의원에게,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국민의 모임 공동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 마쓰하라 진(松原仁) 중의원 의원에게,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국민의 모임 공동대표)가 오사카우신회를 대표해 후지마키 다케시(藤巻健史) 참의원 의원에게,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국민의 모임 공동대표)가 차세대당을 대표해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참의원 의원에게 각각 전달했다.²¹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89명(대리자 포함)에 달했다.

이처럼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보수시민사회는 어떻게 매년 일정 정도 이상의 정책제언활동을 펼쳐 올 수 있었는가? 즉, 보수시민사회는 어떻게 정책결정자들과 일정하게 접촉할 수 있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요인 중 하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의 존재 및 정책제언활동

시민사회 그룹의 정책제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조직 외부적 요건(정치적 상황)과 조직 내부적 요건(조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20 依義文, 『日本会議の全貌: 知られざる巨大組織の実態』, 9~10쪽.

21 『日本の息吹』, 2016년 1월호.

서도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들 수 있다.²² 특히 일본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의원연맹’은 시민단체의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당, 파벌, 위원회 등과 다른 틀에서 정책 과제의 실현, 취미교류, 산업단체 연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결성되는 친목조직인 ‘의원연맹’은 많은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소위 ‘공부회’(세미나)를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의원연맹 가운데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며 헌법과 교육, 주권과 관계된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수의원연맹’도 존재한다. 특히 1990년대에 설립된 보수의원연맹은 이후 설립된 보수의원연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²³ 그 가운데 하나가 1997년 설립된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이다. 이 장에서는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특징과 활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진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 영향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이하 일본회의의원맹)는 1997년 5월 29일, 일본회의가 결성됨에 따라 초당파 의원연맹으로 발족했다. 대부분의 의원연맹의 명칭이 정책이나 사안, 업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특정 단체명을 내건 것이 특이점이다.²⁴ 발족 당시 일본회의는 이 의원맹을 “항시적으로 국민운동과 연계하는 초당파 상설 의원연맹”으로 소개하며, 그 의의로서 “국민운동의 숨결이 늘 국정의 장에 반영되고, 또 각지의 가맹 국회의원

22 Jack L. Walker,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Patrons, Professions and Social Movements*, pp. 111~112. 石生義人, 「ロビイング」, 豊辻中 編, 『現代日本の市民社会・利益団体』, 木鐸社, 2002.

23 구유진,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일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16, 2014; 박철희,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10호, 2014, 86~95쪽.

24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보수의원연맹에 한정했을 때 특정 단체명을 내건 의원연맹은 2건(신도정치연맹국회의원간담회와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뿐이다.

들과 더욱 긴밀한 연계가 기대되는 등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²⁵ 이에 대해 설립총회 간사장이었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는 “일본회의 설립에 호응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당파를 넘어 결집해 국민운동과 연계해 가고자 합니다.”라고 발언했고, 회장에 취임한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역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일본을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세계의 공영공존에 공헌하는 나라 만들기’라는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국회에서 전개해 갈 것”을 약속했다.²⁶ 이와 같은 내용은 일본회의의맹의 설립취의서에서도 잘 나타난다.²⁷

전후 우리나라는 전화(戰禍)가 남아 있는 국토의 부흥과 경제재건에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으뜸가는 경제적 번영을 이뤄 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의 기본인 가정과 사회가 황폐가 되고 국민 가운데에는 지나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대국으로서의 응분의 국제공헌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외에 큰 시련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고 활력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의 발기자들에 의해 광범한 국민운동을 전국에서 추진하는 일본회의가 설립됐습니다.

국정에 몸을 두는 우리들도 전국적인 국민운동에 호응하여 이번에 당파를 초월한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21세기를 맞아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갖는 일본을 다음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세계의 공영공존에 공헌하는 나라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가의 기본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운동과 제

25 『日本の息吹』, 1997년 7월호.

26 『日本の息吹』, 1997년 7월호.

27 『日本の息吹』, 1997년 7월호. 일본회의연구에 일본회의의맹이 항상 거론되는 것에 비해 일본회의의맹이 어떠한 조직인지 그에 관한 활동 자료는 많지 않다. 여기서는 일본회의의맹이 어떤 단체인지 그 단초를 알아보기 위해 조금 길지만 설립취의서를 소개하기로 한다.

휴하여 여론을 환기, 행동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1997년 5월 길일

설립취의서에서 일본회의의맹은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의 안위를 염려해 ‘자랑스러운 국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일본회의에 ‘호응’하고 일본회의와 ‘제휴’하여 활동해 나갈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회의의맹에는 누가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가가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의맹 회장으로는 시마무라 요시노부에서 2000년 10월 13일 총회를 갖고 제2대 회장으로 아소 다로(麻生太郎)가 취임했다. 후술하듯이 유력한 정치인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일본회의의맹은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후 2004년 제3대 회장으로 히라누마 다케오가, 2017년 제4대 회장으로 후루야 게이지가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가의원 수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설립총회 시점에서 184명(중의원 122/참의원 62)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회의 기관지 『일본의 숨결』은 2012년까지 총 4번 의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1995년 부전결의 반대의원 280명(자민당 221명, 신진당 50명 등), 2003년 국립추도시설 반대의원 261명(자민당 중의원 171명, 참의원 70명, 민주당 중의원 5명, 참의원 2명 등), 2005년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 소속의원 158명, 2009년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 소속의원 169명을 발표했다. 소속의원의 명단 공개는 모두 선거 전에 이루어졌는데, 아베 정권하에서는 소속 국회의원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고 2015년 통일지방선거 전 지방의원 전체 명단을 소개한 바 있다. 아베 정권하에서는 다와라(俵義文)가 공개한 두 시기의 소속의원 리스트가 있다. 2016년 시점에서 중참의원 281명(중의원 209명, 참의원 72명)이, 2018년에는 244명(중의원 178명, 참의원 6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²⁸

그렇다면 어떤 의원들이 일본회의의맹에 가입하는가? 일본회의의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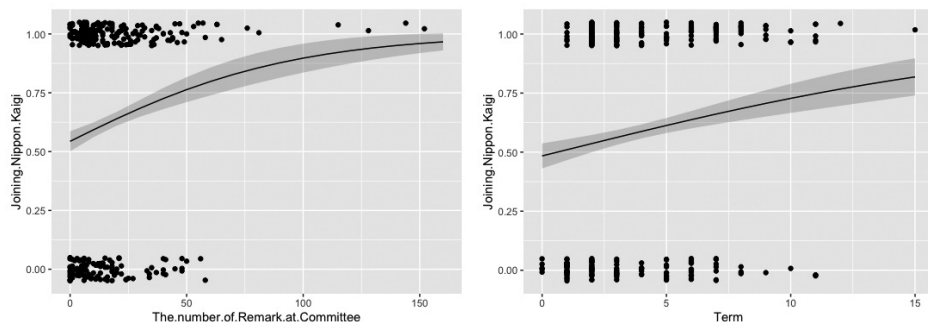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몇몇의 유명한 정치인들과 가입 의원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아베 정권하 의맹 가입 의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즉, 일본회의의맹은 초당파 의원연맹이지만 자민당의원들이 압도적 다수임을 감안해, 중의원 선거 자민당 당선자들 가운데 의맹 가입 의원들이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과 비교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것이다. 2014년(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선거 자민당 당선자들(291명) 가운데 182명이 가입했고, 2017년(10월 22일) 제48회 중의원 선거에는 자민당 당선자들(284명) 가운데 166명이 가입하고 있다. 당선 횟수, 상임위 발언 횟수와 일본회의의 지부 수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제47회 회기에서는 위원회 발언 횟수가 제48회 회기 중에서는 의맹소속의원의 당선 횟수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²⁹

〈그림 3〉을 보면, 2014년 당선자들 가운데 국회 위원회에서 발언 횟수가 많을수록 일본회의의맹 소속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회의의맹 소속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 당선자들 가운데서는 그 특징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대신 당선 횟수가 증가할수록 의맹 소속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2014년 분석에서 당선 횟수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반비례 관계를 보였음을 고려할 때, 2014년 당선 횟수가 적은 의원들이 일본회의의맹에 소속, 그 의원들이 2017년 대부분 당선에 성공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의 결과만을 가지고 일본회의의맹에 가입, 소속하

28 依義文, 『日本会議の全貌: 知られざる巨大組織の実態』, 16~26쪽; 依義文, 『日本会議の野望: 極右組織が目論む「この国のかたち」』, 花伝社, 2018, 13~22쪽.

29 의원 속성변수(나이, 임기), 선거변수(비례당선여부, 당선득표차), 국회활동(본회의 발언 수, 상임위 발언수), 일본회의 조직변수(일본회의 지부 수)와 일본회의의원연맹 가입 여부를 분석하는 로지스틱 분석을 실행했다. 이 가운데 변수 간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 마지막 모델로 임기, 상임위 발언 수, 그리고 일본회의 조직변수를 선택했다. 변수 선택과 모델 설명은 이 글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략했다. 자세한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필자에게 요청을 바란다. 분석 결과와 데이터 소스에 관해서는 부록 참조.



〈그림 3〉 국회 위원회 발언 횟수(2014) · 당선 횟수(2017)와 일본회의의 소속 예측확률

※ 그래프상 점들은 데이터 분포, 범위는 95% 오차 범위

는 것으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³⁰ 대신 상술했듯이, 2014년 당선자 분석에서 국회 위원회 발언 수가 유의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회의의의맹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흥미롭다.³¹ 많은 의원연맹 가입이 이름만 빌려 주는 형태로 가입의원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의원연맹 소속의원 전체를 분석한 이 결과는 많은 의원이 특정단체명이 들어 있는 의원연맹에 가입하고 있다는

30 어떤 의원들이 일본회의의의맹에 왜 가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도 심화된 분석들이 필요하지만, 다른 모델 분석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득표차, 비례당선 여부, 일본회의의 지부 수 변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의 대의제와 유권자를 분석한 다니구치는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03년, 2005년, 2009년 자민당후보들이 우경화했다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공명당의 추천을 받아 고정표가 확보된 자민당 후보가 중의투표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 포지션을 다지는 ‘고정표 효과’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지방표 비중의 증가로 인해 자민당 리더십이 우파적 지지단체(일본유족회나 신도정치연맹 등)에서 더 호소하는 ‘지방표 견인 효과설’과 2009년 전후로 당세가 기울자 당을 결속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차별화를 선택했다는 ‘존엄근거 강조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다니구치는 자민당의 우경화가 유권자 전체의 우경화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谷口將紀, 『現代日本の代表制民主政治: 有権者と政治家』, 東京大学出版会, 2020, 51쪽) 선거 결과에 대한 보수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이 글의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도 그 메커니즘 규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 일본 국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의의 대부분은 질의로 이루어지며, 질의는 법안제출자를 향해 법안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 추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요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에는 기본적 질의(총괄질의)와 일반적 질의(일반질의)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 질의는 각 당 대표급 의원이 법안 혹은 예산 전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 질의는 그 이외의 의원들이 상세한 항목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 질의는 총리나 경우에 따라 모든 장관이 답변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반면, 일반적 질의의 경우 답변이 요구되는 장관의 출석만으로도 이뤄진다.(向大野新治, 『議會学』, 吉田書店, 2018, 162~163쪽) 앞으로의 과제로서 이러한 국회운영과 방침을 바탕으로 국회 위원회 발언 수와 일본회의의의맹 소속의 관계를 더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것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회의와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의 활동과 영향력

이러한 의원들이 모인 일본회의의의맹은 일본회의와 어떤 활동을 펼쳐 왔는가? 설립 총회에서 발표한 활동방침은 다음과 같다.³²

우리는 현재 일본을 둘러싼 내외 모든 정세를 볼 때, 폭넓은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일본회의’와 함께 이하의 활동방침을 가지고 21세기를 전망하는 나라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 (1) 폭넓은 국민운동과 제휴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활력 있는 나라와 사회 건설에 노력한다.
- (2) 새로운 세대에 걸맞은 일본의 헌법을 창조하기 위해 국회에서 헌법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한다.
- (3)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지키고, 국민 복지를 실현시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확립한다.
- (4)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고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 지침을 수립한다.
- (5) 국가를 지키는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방위체제를 정비, 적극적으로 세계평화 건설에 공헌한다.
- (6) 많은 외국과의 우호·친선을 심화하고 공존·호혜가 풍부한 국제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일본회의라는 단체명을 내건 국회의원연맹이라는 점에서, 활동방침 전문에 일본회의와 함께 국민운동을 펼쳐 갈 것에 대한 선언과 일본회의의 활동방침에 맞춰 6가지를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일본회의의의맹은 설립 초기 이후 뚜렷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2000년 10월 총

32 『日本の息吹』, 1997년 7월호.

회를 갖고 아소 다로를 새 회장으로 선출, 활동방침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일본회의는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교육기본법 개정운동에 힘쓰고 주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제언활동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04년 2월에 개최된 ‘일본회의·일본회의의맹 공동간부총회’였다. 교육기본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회의와 일본회의의맹이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해 함께 협의할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간부총회는 전에 없던 첫 시도로, 당일 총회에는 일본회의 간부 31명, 자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30명이 참가했다. 당시 의맹 사무국장이던 에토 세이이치(衛藤 晨一)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통상국회 중에 초당파 의원연맹 ‘교육기본법개정촉진위원회’를 설립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호응해 일본회의 이사장은 국민여론 환기를 위해 조기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서명운동 개시를 발표했다. 이날 일본회의의맹 신회장으로 취임한 히라누마 다케오는 설립총회에서 약속한 두 단체의 밀접한 연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기본법개정운동은 이와 같이 일본회의와 일본회의의맹의 연계하에 추진되었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2005년 통상국회 통과가 좌절되었지만,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뒤를 이어 제1차 아베 내각이 성립하고, 마침내 2006년 11월 13일 개정되었다.

교육기본법 개정운동을 헌법개정운동 전초전으로 자리매김했던 일본회의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자 헌법개정운동으로 그 운동의 중심추를 옮겼다. 하지만 제1차 아베 내각이 단명하고 그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서 헌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제언운동은 정체돼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하여, 2012년 12월 자민당의 총선거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룬 자민당이 부활하게 되었다. 일본회의는 9조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아베 정권하에서 반드시 헌법개정을 이뤄 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 조직을 동원해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했다.³³

우선 상술했듯이, 2014년에 헌법개정운동 전담조직 ‘아름다운 일본

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을 발족시키고, 그해 10월부터 '헌법개정찬성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약 3,000만 명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는 계산하에, 1,0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한 사람이 세 사람을 권유해 3,000만 명을 이뤄 내겠다는 목표였다. 일본회의가 이제까지 전개해 온 서명운동의 최대치가 500만 명임을 상기할 때,³⁴ 이 숫자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모든 소선거구에 '국민투표연락회의'를 설치했고, 또한 일본회의 여성모임인 일본여성회 주도로 '여성에 의한 헌법 수다 모임 카페'(女子の集まる憲法おしゃべりカフェ)를 기획해 전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했다(1,085개 장소에서 2만 8,000명 참가). 이를 바탕으로 개헌찬성의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집회 개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헌법개정 관련 대규모 집회나 5월 3일 헌법의 날 행사에 개최되는 헌법포럼에 헌법개정을 위한 일본회의의 활동을 독려하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2017년 일본회의와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했다. 설립 20주년 기념대회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민주당은 국민에게 책임을 갖는 정당으로서,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며,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고, 일본회의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자위대 9조 명기안에 호응하여, '아리가토 자위대'(ありがとう自衛隊)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2017년 10월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세력이 여전히 3분의 2를 점유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회의는 10월 25일 '이번에야말로 헌법개정원안 국회제출을! 국민집회'를 개최해 개헌파 의원들을 응원했다. 자민당도 당내 헌법개정추진본부를 강화하여, 2018년도 통상

33 일본회의의 헌법개정내용에 관해서는 이명찬, 「일본회의와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이명찬 편, 『'일본회의'와 아베 정권의 우경화』, 동북아역사재단, 2018 참조.

34 1995년 부전결의안 반대 서명운동의 목표치가 500만 명이였다. 具裕珍, 「日本における政治的脅威と保守運動: 1990年代の不戦決議反対運動を中心に」 참조. 교육기본법 개정 서명운동은 500만 명 달성을 이뤄내지 못했다. 1977년 야스쿠니신사공식참배를 요구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달성하지는 못했다(鈴木彩加, 『女性たちの保守運動: 右傾化する日本社会のジェンダー』, 54~55쪽).

국회 제출을 진지하게 추진하였다. 이런 움직임 하에서 2018년 3월 18일 일본회의는 ‘각 당은 정파를 초월해, 합의 형성을! 헌법개정찬성 1,000만 명 달성! 중앙대회’를 개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달성했음을 알렸다.

이와 같이 활발하고 위력적인 활동을 보여 온 일본회의와 일본회의의맹이지만, 그 정책제언활동에 의한 영향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2006년 통과된 교육기본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회의를 비롯한 보수시민사회는 개정안에 “애국심”과 “종교적 정서 함양”을 명기하고 “부당한 지배에 굴하지 않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일본회의가 주장한 상기의 문구는 바람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운동도 마찬가지여서, 아베 정권하 헌법개정운동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으로 큰 시련을 맞게 됐다.

5. 나가며

아베 1강이라고 불리던 아베 정권에서 일본회의는 아베 정권의 강력한 지지세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0년 정치사회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일본 보수시민사회의 재편 과정에서 탄생한 일본회의는 설립 초기부터 국민통합을 위한 천황제 지지, 헌법개정, 애국심을 강조한 교육기본법 개정, 강한 국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고, 그 활동은 점차 활발해졌다. 일본회의는 그 가운데 헌법개정이라는 일본의 전후체제를 뒤흔드는 어젠다를 꾸준히 쟁점화 하였고, 이에 호응하던 아베 정권이 등장하자 누구보다도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일본회의가 아베 정권을 뒷받침한 활동은 전 조직을 동원한 정책제언활동이었다. 정책제언활동은 공공정책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사회의 주체적 행동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글은 일본회의를 일본 시민사회 범주에 넣고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의 관계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제언활동의 구체적 예로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 개최되는 집회와 그 집회에서 발표되는 결의서나 성명서,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베 정권하에서는 헌법 개정운동을 둘러싸고 다수의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발표된 결의서나 성명서가 참석한 정치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매년 5월 3일 헌법의 날에 개최되는 헌법 포럼에 아베 총리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전달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으로 이 글은 의원연맹의 존재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회의의 설립과 동시에 결성된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는 일본회의의 운동을 상시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장으로 기대됐다. 실제 교육기본법 개정과정에 있어서 ‘일본회의·일본회의의맹 공동간부총회’가 기획, 개최되었고 많은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연계는 아베 정권하에서 더욱 강화됐으며 헌법개정운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이러한 일본회의의 활발한 움직임은 정책제언활동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시민사회활동에 있어 ‘정책제언활동을 하는 보수시민사회’ 상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베 정권과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을 지배한다는 인상과 세간의 평가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확실히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담론 형성과 이슈를 끌고 가는 면에 있어서는 일본회의의 정책제언활동의 영향력이 일정 정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의 경우를 봐도 그 내용이 일본회의의 입장에서는 불충분할지언정 60년 만에 개정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그 영향력은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관해서 일본회의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시민사회의 정책제언활동뿐 아니라 아베 정권 하에서는 70년대 중후반 이후 “빙하기”라고 불렸던 ‘사회운동’의 움직임들이 대거 분출되기도 했다.³⁵ 2015년에는 안보

법제반대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한때 국회 앞에 12만 명이 집결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전쟁법(안보법제) 폐지 2,000만 명 서명’ 운동이 일어나 1,800만 명의 서명이 모였다.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아베9조개헌 NO! 3,000만 통일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2018년 5월 3일 헌법의 날 집회에는 6만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³⁶

이처럼 과대평가와 때로는 과소평가라는 극단에 있는 일본회의의 활동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치사회와 더 나아가 일본의 민주주의를 보는 우리의 시선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³⁷

[부록]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 결과

	2014년 자민당 당선자(N=291) 의맹가입(1), 미가입(0)	2017년 자민당 당선자(N=284) 의맹가입(1), 미가입(0)
당선 횟수	-0.030 (0.043)	0.084 † (0.047)
국회 위원회 발언 수	0.019* (0.008)	0.012 (0.007)
일본회의 지부 수	0.024 (0.023)	0.025 (0.022)
intercept	0.089 (0.285)	-0.362 (0.311)

※숫자 회귀계수, 괄호 표준오차, *** p<0.001, ** p<0.01, * p<0.05, † p<0.1
 ※데이터: 당선 횟수(NHK 선거결과), 국회 위원회 발언 수(Sugawara Taku, 『국회의원백서』, <https://kokkai.sugawarataku.net>, 최종검색일: 2021. 5. 20.), 일본회의 지부 수(依義文, 『日本会議の全貌: 知られざる巨大組織の実態』, 2016; 依義文, 『日本会議の野望: 極右組織が目論む「この国のかたち」』, 2018, 자료편).

35 樋口直人·松谷満 編, 『3・11後の社会運動: 8万人のデータから分かったこと』, 筑摩書房, 2020.
 36 飯田洋子, 『九条の会: 新しいネットワーク形成と蘇生する社会運動』, 花伝社, 2018; 依義文, 『日本会議の野望: 極右組織が目論む「この国のかたち」』, 12쪽 참조.
 37 大嶽秀雄, 『平成政治史: 政界再編とポスト冷戦型社会運動』, ちくま新書, 2020, 117쪽 참조.